

2가구 4명 사는 섬에 12억 들인 전기공급공사

“철탑흉물…예산낭비” 환경단체 반대

“섬 사람도 국민이다” 주민들은 환영

여수시 남면 소황간도

2가구 4명만이 사는 섬에 전기 공급공사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여수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수시는 남면 소황간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공사를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했다. 3개의 철탑을 설치, 1km 거리에 있는 대황간도로

부터 전기를 끌어들이는 공사로 국비 포함 12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다. 문제는 이 섬에 거주하는 주민이 단 4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모두 노령이라는 점이다. 하루 몇 시간씩의 ‘발동기 전기’에 의지해온 이들 주민에게 전기공급은 꿈에 그리던 일이지만 몇몇 단체들이 ‘환경파괴’를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소규모 섬에 대규

모 선로공사를 벌이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경을 파괴하게 된다”며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공급이 바람직하다”며 선로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소황간도의 경우 선로공사 비용의 30%선인 4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태양열전지판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낙도 주민들의 인권은 환경론에 밀려 희생돼도 되느냐는 공사

옹호론도 만만찮다.

대·소 황간도 주민들 역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양질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선로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도 “섬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기 공급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해 온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국 섬 살리기 운동본부 이재언 본부장은 “세월이 흘러 황간도가 무인도로 변모하면 철탑과 전주를 다시 철거할 수밖에 없다”며 “여수시가 현 주민들이 민족화 만 한 대안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시민연대 김일주 사무국장은 “철탑공사는 해양을 여수발전 방향의 테마로 삼고 있는 여수시의 정책방향과 어긋난다”며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이뤄진 졸속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기부금 모금

등록제 전환

소요경비 15%로 확대

오는 25일부터 기부금품 모금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기부금 품 모집에 따른 소요경비도 최대 모금액의 15%까지 인증된다.

종전에는 모금액의 2%까지만 소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금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부금품 모금 활동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 전환과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확대에 따른 회계감사의무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글자로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농촌결혼 이주여성

관광가이드로 활용

전남도 31명 양성교육

전남지역 농촌결혼 이주여성들의 관광가이드 역할이 확대된다.

전남도 여성회관(관장 정정신)은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1일 2시간씩 주 2회(매주 화, 금요일) 총 20회에 걸쳐 나주시 결혼 이민자 지원센터 교육실에서 농촌결혼 이주여성(필리핀 14명, 일본 7명, 중국 6명, 몽골 1명, 우즈베키스탄 2명, 인도네시아 1명) 31명을 대상으로 지역관광가이드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외국 이주여성들을 지역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을 안내하게 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물, 예술, 지역 축제 등의 이론교육 및 발표 능력, 현장 답사 등으로 짜여진 교육을 마친 이주여성들은 지역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을 안내하게 된다.

/부처경기자unipark@kwangju.co.kr

판·검사 징계 강화 법사위,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판·검사 징계강화를 골자로 한 검사징계법 및 법장관징계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들 법안은 장계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판·검사들로만 구성된 현행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 3명의 외부인사가 참여하고, 징계 청구 시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진민기자 man21@

“정부와 대화 않겠다” 민주노총 위원장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18일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지만 정부가 부도덕하게 대화 판을 깐다”며 “신의가 없는 정부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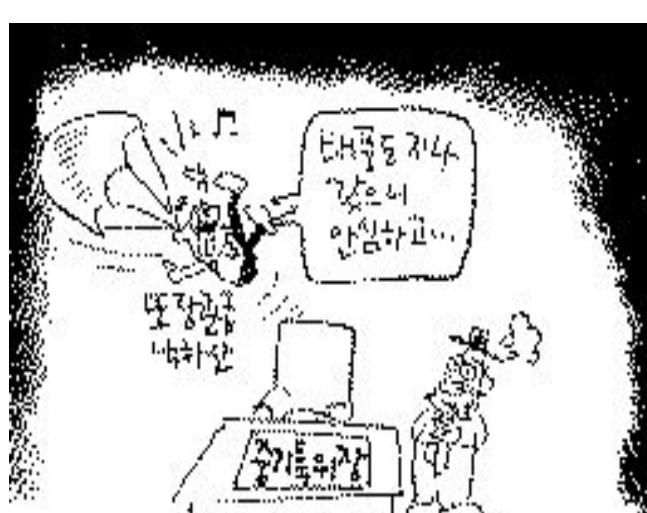
조 위원장은 이날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로드맵 제시 등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남북수해동포돕기 광주·전남운동본부는 18일 광주시 금남로 1가 민주의 종각 앞에서 북녘 수해지원 물자 환송식을 가졌다. 이날 환송식에는 주민들이 모금한 현금 6천여만원과 시멘트·의류 등 물자가 전달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날씨만평

- 김종두



날씨까지 고려해서 내려온다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율 광주시 43% 전국 최하위

3년간 60만건 245억 달해

전국 6대 도시 중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시로 조사됐다. 주차위반 단속 실적도 가장 저조했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안

경률(해운대·기장) 의원이 18일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율은

광주시 43.7%로 가장 낮았고, 부산이

44.8%, 인천 46.0%, 서울 46.1%, 순이었으며 대구가 50.3%로 가장 높았다. 6대 도시의 과태료 납부율 합계는 3천547억원으로 실제 납부율이 46.3%에 그쳤다.

최근 3년간(2003년 8월~2006년 8월) 광주시의 주차위반 단속건수는 총 60만1천220건, 이에 따른 과태료는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다른 광역시의 단속실적은 서울(단속 1천158만건·과태료 4천721억원), 부산(단속 259만건·과태료 1천51억원),

인천(167만건·685억원), 대구(128만건·525억원), 대전(105만건·429억원)으로 광주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에 비해서도 단속 건수가 적었다. 승용차 1대당 평균 단속 횟수는 광주가 0.4회,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이 1.4회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이 1.2회, 부산이 1.0회, 인천 0.8회, 대구 0.6회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말 현재 광주시의 공영주차면수는 2만3천221면(승용차 대수 38만7천464대)으로 나타났다.

도시별 승용차대수 대비 공영주차장 비율은 대전이 6.3%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5.8%로 두 번째였다. 대구(5.1%), 인천(4.9%), 부산(4.2%)가 그 뒤를 이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광주시민연금공단 ‘혈세’로
3년간 60만건 245억 달해

▲광주시민연금공단은 18일 광주시 종각 앞에서 북녘 수해지원 물자 환송식을 가졌다. 이날 환송식에는 주민들이 모금한 현금 6천여만원과 시멘트·의류 등 물자가 전달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율 광주시 43% 전국 최하위

3년간 60만건 245억 달해

전국 6대 도시 중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시로 조사됐다. 주차위반 단속 실적도 가장 저조했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안

경률(해운대·기장) 의원이 18일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율은

광주시 43.7%로 가장 낮았고, 부산이

44.8%, 인천 46.0%, 서울 46.1%, 순이었으며 대구가 50.3%로 가장 높았다. 6대 도시의 과태료 납부율 합계는 3천547억원으로 실제 납부율이 46.3%에 그쳤다.

최근 3년간(2003년 8월~2006년 8월) 광주시의 주차위반 단속건수는 총 60만1천220건, 이에 따른 과태료는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다른 광역시의 단속실적은 서울(단속 1천158만건·과태료 4천721억원), 부산(단속 259만건·과태료 1천51억원),

인천(167만건·685억원), 대구(128만건·525억원), 대전(105만건·429억원)으로 광주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에 비해서도 단속 건수가 적었다. 승용차 1대당 평균 단속 횟수는 광주가 0.4회,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이 1.4회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이 1.2회, 부산이 1.0회, 인천 0.8회, 대구 0.6회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말 현재 광주시의 공영주차면수는 2만3천221면(승용차 대수 38만7천464대)으로 나타났다.

도시별 승용차대수 대비 공영주차장 비율은 대전이 6.3%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5.8%로 두 번째였다. 대구(5.1%), 인천(4.9%), 부산(4.2%)가 그 뒤를 이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율 광주시 43% 전국 최하위

3년간 60만건 245억 달해

전국 6대 도시 중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시로 조사됐다. 주차위반 단속 실적도 가장 저조했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안

경률(해운대·기장) 의원이 18일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율은

광주시 43.7%로 가장 낮았고, 부산이

44.8%, 인천 46.0%, 서울 46.1%, 순이었으며 대구가 50.3%로 가장 높았다. 6대 도시의 과태료 납부율 합계는 3천547억원으로 실제 납부율이 46.3%에 그쳤다.

최근 3년간(2003년 8월~2006년 8월) 광주시의 주차위반 단속건수는 총 60만1천220건, 이에 따른 과태료는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다른 광역시의 단속실적은 서울(단속 1천158만건·과태료 4천721억원), 부산(단속 259만건·과태료 1천51억원),

인천(167만건·685억원), 대구(128만건·525억원), 대전(105만건·429억원)으로 광주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에 비해서도 단속 건수가 적었다. 승용차 1대당 평균 단속 횟수는 광주가 0.4회,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이 1.4회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이 1.2회, 부산이 1.0회, 인천 0.8회, 대구 0.6회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말 현재 광주시의 공영주차면수는 2만3천221면(승용차 대수 38만7천464대)으로 나타났다.

도시별 승용차대수 대비 공영주차장 비율은 대전이 6.3%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5.8%로 두 번째였다. 대구(5.1%), 인천(4.9%), 부산(4.2%)가 그 뒤를 이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율 광주시 43% 전국 최하위

3년간 60만건 245억 달해

전국 6대 도시 중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시로 조사됐다. 주차위반 단속 실적도 가장 저조했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안

경률(해운대·기장) 의원이 18일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율은

광주시 43.7%로 가장 낮았고, 부산이

44.8%, 인천 46.0%, 서울 46.1%, 순이었으며 대구가 50.3%로 가장 높았다. 6대 도시의 과태료 납부율 합계는 3천547억원으로 실제 납부율이 46.3%에 그쳤다.

최근 3년간(2003년 8월~2006년 8월) 광주시의 주차위반 단속건수는 총 60만1천220건, 이에 따른 과태료는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다른 광역시의 단속실적은 서울(단속 1천158만건·과